



산업자원부 구미협력과장 심 동 섭

EU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EU(European Union)는 '04.5.1일자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¹⁾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총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EU는 인구 4억 5천만명, GDP 9조 6천억 유로에 달하며, 세계 교역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금번 EU 확대로 거대 소비지인 서유럽시장과 생산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지닌 중동구가 결합되게 된 바, 유럽시장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동구권 자체가 이머징 마켓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EU의 경제환경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동구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동구시장은 주요 소비지인 서유럽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뿐 아니라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단기적인 EU의 재정지원²⁾ 및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대에 따라 소비재 및 사회간접자

본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EU의 공동관세 및 수입규제조치, 환경정책 등이 신규가입국으로 확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회원국과의 대외교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인화된 EU의 공동관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공산품의 경우에는 상당폭의 관세인하³⁾가 예상된다.

또한, EU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도 신규 회원국에 적용된다. 그러나, 조사⁴⁾에 의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신규가입국에 대한 수출량 미미 또는 현지 생산공장 확보 등으로 수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고,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일부 업체에서 피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90년대 말 이후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5)」을 도입하여 온 EU의 강력한 환경규제⁶⁾도 신규가입국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1) 신규가입 10개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말타

2) EU의 재정지원

-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 공동체 평균 GDP의 75% 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과 심각한 산업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투입, 청년실업의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되는 기금
- 결속기금(Cohesion Funds) : 1인당 국민소득이 EU평균의 90% 미만인 국가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사회인프라 등을 서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금

3) EU의 공산품 평균관세는 3.6% 수준, 폴란드 및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은 각각 9.9%, 8.0%, 7.0% 수준

4) 수입규제조치 확대관련 개별기업 피해여부 조사

- 2003.12월 현재 EU로부터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는 10개 품목의 해당기업 및 업종별단체 19개
- 2003년 12.1~12.13일간, 산업자원부 품목과별로 해당기업 및 업종별단체에 전화 및 설문 조사
- 유럽현지화 완료 또는 수출규모 미미 등의 사유로 수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다수

5) 원자재로부터 제품설계·생산·사용·폐기단계의 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순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 감소 및 자원 사용의 효율 개선을 고려하는 개념

6) 환경규제

- 물질사용규제 : 가전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 사용금지, 아조염료 사용금지, 자동차폐차지침
- 재활용의무부과 : 폐가전지침, 폐차지침, 포장재의 재활용
- 표시의무부과 : 에코라벨, CE마크, 에너지라벨링
- 기타 : 자동차 배기가스(CO₂) 배출규제

환경관련 비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질사용규제 및 폐가전지침 등 EU 환경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자업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기 언급한 EU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및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민간차원에서는 현지진출 확대 및 既진출법인의 역량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 관세인하 효과 및 신규가입국의 경제성장, 기타 개방화의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한 신규가입국에의 직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관세인상 품목의 경우에는 EU내 생산거점을 통해 우회수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제품의 경우, ITA(정보기술협정) 적용품목(컴퓨터, 통신기기 등) 및 관세인하 품목(세탁기, 냉장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레인지 및 VCR?컬러 TV 등 일부 관세인상 품목은 생산공장 현지화를 완료한 상태에 있어 수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유럽시장 공략, 원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동구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삼성·LG전자, 기아자동차 등 주요업체들이 서유럽 생산기지를 동유럽으로 이전하거나, 동구권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既진출 지역으로부터 동구 등으로 생산거점을 재조정하는 경우⁷⁾에는 주재국 언론, 지역사회 및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해당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EU의 통상정책 확대적용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첫째, 공동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EU측에 품목 리스트를 통보 하였던 바('04. 4. 16), 향후 주요 관련국의 대응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보상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수입규제조치의 자동확대 문제는 규범적 차원에서 신규가입국에 대한 새로운 수입장벽으로 작용, 자유무역에 반한다는 점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4차에 걸친 EU의 확대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별기업 차원의 재심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인 바, 해당업체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EU의 환경기준은 EU지역과의 교역에 부담이 되기도 하나, 우리업체의 환경친화적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EU의 환경기준이 우리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주시하면서 우리업체들의 환경관련 관심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⁸⁾

거대 소비지 및 생산거점으로서 부각된 유럽시장을 앞에 두고,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세계 주요 경제권 중에서 가장 동질적이며, 고도로 통합된 시장을 가진 EU가 금번 통합을 계기로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향후 천연자원 부국인 CIS 국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EU의 확대는 기회이자,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변화된 환경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행한 뒤, 진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라 생각된다. ●

7) 삼성전자는 '04.1월 영국 Winyard에 설립했던 모니터·전자레인지 생산기지 철수를 발표하였으며, LG 전자는 '03.8월 영국 웨일즈 공장(브라운관 생산)을 철수

8) EU의 환경기준에 대한 대응 : EU.환경기준의 전파, 업종별 대응 등으로 추진
 - 전자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을 EU 환경기준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정
 - 업종별 전담기관들은 학계, 연구소,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및 EU지역 기업들과 가능한 국제협력 도모